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11월 9일 목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江原日報	02면	'소양강댐 사용권 반환' 총선 공약 반영 총력	1
강원도민일보	04면	"소양강댐 피해지 상생 법제화 총선 공약 반영을"	2
춘천MBC	온라인	소양강댐 지역 상생 방안, 총선 공약 건의	3
江原日報	02면	강원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돌입	4
KBS 춘천	온라인	강원도교육청, 내년도 예산안 3조 9,709억 원 편성	4
江原日報	11면	"중학교 통학로 안전 확보 시급"	5
강원도민일보	02면	도의회, 태백 수소 규제자유특구 업체 선정 지적	5
KBS 강릉	온라인	'빈손' 그린수소 실증사업 집중 질타	6
江原日報	02면	"강원-서울 한마음 한 몸 되어 협력하자"	7
江原日報	04면	"노인 일자리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	8
江原日報	19면	[강원포럼] 영동지역 독립재활병원의 필요성	9
江原日報	온라인	[동정] 윤길로 강원특별자치도의원	10
강원도민일보	14면	[동정] 윤길로(영월) 도의원	10
강원도민일보	01면	'특별한' 강원-서울, 균형발전 파트너가 되다	11
강원도민일보	03면	"윤 정부 실세 전부 강원엔... 서울·강원 일심동체 될 것"	12
강원도민일보	03면	강원도-서울시 상생 실천 1호 '삼척 골드시티'	13
강원도민일보	04면	도교육청 내년도 본예산 1720억원 ↓... "사업 축소 없다"	14
江原日報	05면	철원서 18억대 다세대주택 집단 전세사기 의혹	15
강원도민일보	04면	춘천 산수리~홍천 모곡리 상수도관로 놓고 '동상이몽'	15
강원도민일보	11면	경포 올림픽특구 숙박단지 3곳 조성 속도감	15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의대 지역인재 확대, 지역 근무가 관건	16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정원사업 관광객만 쳐다보면 안돼	17
江原日報	19면	[사설] 청년들이 떠나는 강원자치도, 희망을 잃고 있나	18
江原日報	19면	[사설] 줄줄 새는 실업급여, '눈먼 돈'으로 계속 놔둘 건가	19

江原日報

2023년 11월 09일 (목)

종합 02면

‘소양강댐 사용권 반환’ 총선 공약 반영 총력

피해공동대책위 간담회
20일 주요 정당 등 찾아
촉구 건의문 전달 계획

소양강댐 피해지역 공동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내년 4·10 총선을 앞두고 소양강댐 주권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내용이 각 정당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양강댐 주변 지역 피해지원 연구회 소속 도의원 9명과 춘천시·화천군·양구군·인제군의회의원 8명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8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소양강댐이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공약을 주요 정당의 내년 총선에 반영해 달라고 촉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의문 내용을 협의하고 전달 방법과 일시 등을 논의했다.

대책위는 오는 20일께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 도당 사무처를 찾아 건의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또 내년 1월께 국회에서 포럼을 갖고 소양강댐 주민들의 상황과 특별법 필요성에 대해 알릴 예정이다.

의원들은 건의문에 소양강댐 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양강댐 피해지역 공동 대책위원회는 8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박기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양강댐 지역상생 공약 건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승선기자

공 50주년을 맞아 댐 건설로 마을이 수몰돼 고향을 잃고, 안개 피해 등 희생을 감내한 강원자치도민들이 댐 사용권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기로 결정했다. 또 주민들이 소양강댐에 대한 권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받고 댐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하기로 했다.

박기영(춘천) 소양강댐 피해지역 공동 대책위원장은 “강원자치도는 수자원과 관련된 갈등과 분쟁의 역사로 점철돼 있다. 취수원 이전으로 인한 물값 문제, 냉수 및 안개 피해 등을 겪고 있으나 소양강댐 관리자와 수도권 주민들은 천문학적 편익을 얻고 있다”며 “주요 공당의 강원 지역 총선 공약에 ‘자치분권 시대에

부합하는 댐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법제화’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향후 강원도의 댐 관련 지역에서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를 대상으로 댐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법률안 발의와 통과에 대한 서명동의 운동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정기자 together@

강원도민일보

2023년 11월 09일 (목)

종합 04면



지방의원으로 구성된 '소양강댐 피해지역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박기영)가 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소양강댐 지역상생 공약'을 강원도내 정당과 총선 출마예상자들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사진 제공=강원도의회

“소양강댐 피해지 상생 법제화 총선 공약 반영을”

도내 지방의원 구성 공대위 간담회

강원도내 지방의원들이 소양강댐 피해지역 권리 보장을 위한 공약을 도내 각 정당에 건의하는 등 법제화 활동에 나선다.

춘천·화천·양구·인제 등 소양강댐 지역 광역·기초의원으로 구성된 '소양강댐 피해지역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박기영)는 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소양강댐 지역상생 법제화를 위한 총선 공약 반영 촉구 건의문에 △지원금 확대 △소양강댐 주변지역 권리 법제화 등의 내용을 담기로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재규 인제군의원은 “피해지역이 받는 지원금에 대해서도 명확한 권리 행사가 필요하다”며 시·군 지원금 확대를 언급했다.

박기영 공대위원장은 “댐이 있는 다른 지역과 지원금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라며 “시군의원, 도의원, 국회의원에게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소양강댐 지역상생 법제화 공약을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도내 각 정당에 전달하고, 내년 총선 출마예상자들과 간담회 등을 열 계획이다.

이설화

춘천MBC

2023년 11월 08일 (수)

강원

소양강댐 지역 상생 방안, 총선 공약 건의

소양강댐 피해 지역 공동대책위원회가

소양강댐 지역 상생 방안 법제화를

내년 총선 공약으로 건의했습니다.

강원도의회와 시군의원들로 구성된 공대위는

소양강댐 준공 50주년을 맞아

소양강댐이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려면

단순히 지원금을 더 지원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변 지역이

소양강댐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소양강댐 초과 수익 지역 환원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이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승호

bsh@chmbc.co.kr

신아일보, 세계타임즈 등 12개 언론사 보도

江原日報

2023년 11월 09일 (목)

종합 02면

강원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돌입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8일 강원 자치도와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감사 첫날에는 특별자치추진단, 의회 사무처, 공무원 교육원 등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도 특별자치추진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 시행령 개정 상황을 점검하고 3차 개정 에 포함될 특례 등을 당부했다.

류인출(원주) 의원은 의회 관련 특례가 반영될 수 있는지 질문했다. 이에 김상영 특별자치추진단장은 “3차 개정안에서는 관련 논리를 보강해서

부처 협의를 하려고 한다”며 “자치조 직권, 인사운영권, 예산편성권, 비례 의원 정수 등 당초 요구대로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행안부가 최근 일부 긍정 검토 움직 임이 있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김길수 (영월) 기획행정위원장은 “도민들이 절대 농지 해제와 산림이용진흥지구 시행에 관심이 많다. 내년 6월부터 시행될 텐데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위원회에 보고절차를 밝아 달 라”고 주문했다. 이현정기자



2023년 11월 08일 (수)

강원

강원도교육청, 내년도 예산안 3조 9,709억 원 편성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1,720억 원 적은, 3조9,709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인공지능 학습 플랫폼 운영 등 학력 향상과 교육 복지, 디지털 기반 교육 구축 에 중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세수 결손 상황에 대비해 사업 투자 시기 조정과 기금 4,075억을 충당해 교육 정책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 편성안은 이달 10일 강원도의회에 제출돼 심의됩니다.

김영준 yjkim1@kbs.co.kr

2023년 11월 09일 (목)

江原日報

지역 11면

“중학교 통학로 안전 확보 시급”

원주기업도시 교육현안협
시 “도로 확장·신설 검토”

【원주】속보=2025년부터 원주 기업도시 중학교 진학생의 섬강중·지정중 분산배치가 확정(본보 10월6일자 17면 보도)된 가운데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시급한 해결방안으로 꼽혔다.

원주기업도시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현안협의회가 8일 섬강중에서 박정하 국회의원, 김태훈 원주부시장, 박길선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조용석 원주시의원, 주영일 원주교육장, 기업도시 주민,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학부모들은 “2025년부터 150명의 학생이 지정중을 다니는데 도로 상태가 좋지 않

아 안전사고 발생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주시는 기업도시와 지정중 간 왕복 2차선 도로를 4차선 도로로 확장하거나 별도의 직선도로를 신설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만간 해당 도로를 농어촌 도로에서 시도도로로 승격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정하 국회의원은 “기업도시가 가장 교육환경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원주시, 교육당국과 함께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김태훈 부시장은 “현재 관련 용역 중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한 통학을 위해 원주시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설영기자 snow0@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3년 11월 09일 (목)

종합 02면

도의회, 태백 수소 규제자유특구 업체 선정 지적

이한영 “기업평가 D등급 수준”
도 “적격성 심사·부채비율 통과”

속보=‘담당 업체 부실’로 지정해제 위기(본지 10월 26일자 1면)에 놓인 태백 수소 규제자유특구와 관련,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업 보조금이 잘 쓰여지고 있는지만 살폈어도 이 사달까지 안왔다”며 ‘땡탕 행정’을 지적했다. 목소리가 나왔다.

이한영(태백) 도의원은 8일 경제산업위가 진행한 미래산업국행정사무감사에서 태백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수소 생산 규제자유특구 총괄담당 업

체인 ‘그린사이언스’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제껏 수십억원 가까이 보조금 등을 줬는데(업체는) 지난 10년동안 아무것도 안했다”며 “기업 평가를 보니, 엉망이다. D등급이나 왔다. 200억 규모의 사업(규제자유특구)을 수행할 수 없는 등급”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앞서 “이런 부실기업을 갖고 강원도는 규제자유특구 신청을 했다”고 지적하자 이에 확일구 미래산업국장은 “(특구사업) 신청 당시 해당부처에서 적격성 심사를 받았고, 부채비율(기준)이 있는데 자격조건이 통과된 걸로 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강

원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린사이언스는 지난 2013년 대전에서 태백으로 이전하면서 강원도로부터 설비투자보조금과 부지매입보조금 등 10억4500만원을 받았다. 또, 무연탄 활용 수소생산 개발 사업으로 4억5000만원, 플라스틱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으로 18억원을 받았다. 광 국장은 “일단 이렇게 됐으니, 수사의뢰가 돼 있고 감사도 하고 있다. 실제 지출여부도 다 확인하고 있다”며 “사건이 터진 건 보증보험의 책임도 있다. 보조금 환수나 민사소송은 감사와 상관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도 감사위는 지난달 30일 시작한 감사를 7일로 일차적으로 마무리했다. 오는 27일부터 2주간 2차 감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설화·김덕형



2023년 11월 08일 (수)

강원

‘빈손’ 그린수소 실증사업 집중 질타

앵커

석탄과 플라스틱으로 수소를 만드는 강원도의 실증사업이 빈손으로 중단됐다는 소식을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강원도에 대한 올해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원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첫날,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기업에 대한 검증부터 장비 구입 등 예산 집행과정 관리 전반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이어집니다.

특히, 해당 기업이 도비 지원에 맞춰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를 제대로 집행했는지도 의심스럽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기홍/강원도의회 경제산업위원 : "그냥 자기네가 부담해야 되는 것을 인건비로 그냥 명목상 해놓고, 그리고 18억 원 나머지는 전체 다 우리 세금으로..."]

[곽일규/강원도 미래산업국장 : "제대로 지출이 안 된 것 같은 그런 보고가 된 게 있어서 지금 조사하고..."]

이 과정에서 어렵사리 지정된 태백 규제자유특구까지 해제 위기에 놓였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태백 규제자유특구는 목재로 그린수소를 만드는 사업으로 5월 정부 지정을 받았는데, 핵심사업체가 해당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업 경영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강원도도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한영/강원도의회 경제산업위원 : "여러분들이 보조금을 20억, 30억 원, 그리고 40~50억 원 되는 보조금을 줬는데 그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 지난 10년 동안..."]

강원도는 기업 검증과정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수궁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곽일규/강원도 미래산업국장 : "2021년 4월부터 이게 추진이 됐잖아요. 규제자유특구가. 그때부터 '제대로 좀 봤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은 들죠."]

한편, 강원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 전반에 대한 특정 감사를 한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이달 27일부터 추가 감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

박성은

江原日報

2023년 11월 09일 (목)

종합 02면

“강원-서울 한마음 한 몸 되어 협력하자”

국민의힘 도당 오세훈 서울시장 초청 간담회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이 강원특별자치도와 서울특별시 간 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장은 서울시와 강원 자치도가 한마음, 한 몸이 되는 경지에 이르기까지 뛰겠다고 화답했다.

도당은 8일 도당사에서 오세훈 시장을 초청, 주요 당직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정하(원주갑) 도당위원장,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국회 국방위원장, 김진태 지사, 박기영 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 김진호 춘천시의장을 비롯한 시·군 의원이 참석해 오시장을 반겼다.

김진태 지사는 “특별자치도와 특별시 간 특별한 만남을 했는데 ‘골드 시티’라는 멋진 사업을 구상해 오서

서, 잘되면 한 번에 5,000명 인구가 늘 수 있다”며 “삼척시가 첫 번째고 춘천시가 원하면 두세 번째가 될 수 있다는 큰 구상을 갖고 있다. 서울시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소개했다.

박정하 도당위원장은 “오 시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지도자 중 한 명이고 당을 상징하는 정치적 자산”이라고 짚었다. 이어 “정치적 경륜을 조화롭게 이뤄 상생 발전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도와 서울이 가까운 만큼 서울시민과 함께 가는 것이 강원도 발전이라고 강조한 한기호 의원은 “3선 이상 출마하지 말든가, 어디로 가라 그러는데 서울시장은 4선이다.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

니다. 더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시장은 “(강원도와 서울시가)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한 몸처럼 뛰자고 약속하고 오는 길”이라며 “일심동체가 되는 경지까지 협력관계를 만들어 갈 생각”이라고 답했다. 또 “김 지사와 군 기무사 근무 당시 전우의 연을 맺고 협약까지 하니 감회가 새롭다”며 “실세가 전부 강원도에 있다. 정권을 좌지우지하는 이들이 강원 출신이어서 아부하러 왔다”고 했다. ‘메가시티 서울’에 대해서는 “선거 전략만으로 폄하되는 경향이 있는데 선거 후까지 논의할 계획이다. 외국에서 서울에 온 이에게 가까운 강원도로 가라는 것은 어렵지 않다. 강원과 서울은 한 몸이 될 직하다”고 했다. 이현정기자

江原日報

2023년 11월 09일 (목)

사회 04면

“노인 일자리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

강원특별자치도 내 노인일자리 확충과 일자리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인 일자리 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컨트롤타워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재웅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장은 8일 도여성가족연구원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과 노인의 역할’ 토론회에서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한 TF팀 구성과 도정의 적극적인 지원 등을 제안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강원자치도 광역 노인일자리 사업의 중심 기관 설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어르신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일자리정책이 추진되기 바라며, 노인을 ‘연령’이 아닌 ‘능력’ 있는 주체로 바라보는 사회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발제자로 나선 허목화, 민연경, 송사리 도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은 도내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시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강원자치도의 노인 인구 동향과 노령화 문제’, ‘강원자치도 경로당 의미와 기능확대 방향’, ‘강원자치도 노인의 지역사회 참여’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발제에 이어 최근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 토론에서는 질의, 응답과 함께 경로당 이용자와 노인복지관 이용자 간의 경제적 양극화 문제 등

도노인회·본보 공동 ‘강원자치도 출범과 노인의 역할’ 토론회 “노인을 ‘연령’ 아닌 ‘능력’ 있는 주체로 바라보는 사회 만들어야”

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이어졌다.

최병수 강원일보 전무이사는 “강원자치도의 법 조항은 84개에 불과하고, 그중 노인과 관련된 법은 전무할 정도다. 도내 노인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들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강원 노인들을 위한 논의들이 정책에

반영돼 강원자치도가 노인이 살기 좋은 실버타운이 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건실 도노인회장은 “이번 토론회는 노인의 역할을 고민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노인들이 이사회를 더 활기 차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또, 이번 토론회가 노인들이 강원도의 발전에 지대한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숙영 도여성가족연구원장은 “강원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도내 32만명의 어르신이 보다 특별하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더 많은 자치 권한을 통해 보다 실용적인 어르신 복지정책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강원자치도노인회와 도여성가족연구원, 강원일보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했으며, 강원특별자치도가 후원했다. 김민희·김오미기자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노인의 역할 토론회가 8일 강원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이견실 (사)대한노인회 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장, 최병수 강원일보 전무이사, 정재웅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장, 김숙영 도여성가족연구원장을 비롯한 내빈과 주제발표자, 토론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신세희기자

江原日報

전 세계적으로 수명 연장과 출산을 저하에 따른 인구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2030년대 들어서면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출생률과 고령인구 증가로 인구절벽이 현실로 다가오게 된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인구 대비 고령화 비율이 전국 4위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인구 역피라미드 구조에서 고령인구를 위한 공공의료서비스는 특히 중요한 문제다. 노년 인구의 증가는 치매 유병률 등 노인성 질환의 증가와 비례하게 되고, 이는 우리 도민이 감당해야 할 비용 확대와 환자 돌봄에 따른 가족들의 삶의 질 문제와 직결된다. 고령화 현실에

따라 도립재활병원 이용률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증가했고 2021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 70.13%를 크게 상회하는 74.45%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강원자치도 제1기 및 제2기 재활병원 지정은 춘천에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재활병원 1곳에 불과하다. 심지어 인구당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는 전국 평균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더욱이 강원자치도는 넓은 면적과 영동, 영서 간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강원포럼

심 오 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 부위원장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영동지역 도민들은 도립재활병원 이용이 매우 제한적이며 지역 생활권 내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강원자치도가 직면하고 있는 재활치료 서비스 불균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영동지역과 인접한 10개 시·군 도민들이 원활한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을

영동지역 도립재활병원의 필요성

수 있도록 영동지역에 도립재활병원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 강릉을 비롯한 영동지역 시·군의 고령인구 비율은 평균 30%를 상회하고 있다. 그만큼 재활치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강원 영동지역 거점에 도립재활병원을 추가 설립해 영동, 영서 지역간의 불평등 해소와 도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겠다.

도립재활병원이 추가 설립된다면 지역사회 협력체계 또한 강화할 수 있다. 지역 내 대학 보건학과와 일리리를 연계하고 강원도립대 내에 보건

2023년 11월 09일 (목)

오피니언 19면

계열 학과를 추가 개설하는 등 지역사회가 도립재활병원을 중심으로 산·관·학 네트워크를 조성할 수 있다. 도립대에 추가적으로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작업치료학과 등 보건계열 학

과를 개설한다면 도 출신 학생들이 도립대 보건계열 학과를 졸업하고, 도립재활병원 및 도립의료원에 취업함으로써 인재 유출을 줄이고 도민 모두가 상생하는 시너지 효과도 얻을 수 있다.

해외의 경우 핀란드는 2070년 65세 이상 인구가 33%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국가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고심, 맞춤형 의료 혁신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관 협업 등 프로젝

트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강원자치도에서도 사회적 변화에 맞추어 선제적인 고민과 대응이 필요하다. 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재활치료를 제공할 강원특별자치도립재활병원이 영동권에도 추가 설립돼 도내 어디서든 건강한 삶, 노령 친화적인 삶, 장애 친화적인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원자치도의 의료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영동지역 도립재활병원 설립은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사업으로서 빠르면 빠를수록 도민의 복지 향상과 삶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이다.

江原日報

2023년 11월 08일 (수)

종합

[동정] 윤길로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윤길로(영월) 도의원은 9일 오전 10시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락앤홀에서 열리는 제61주년 소방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

강원도민일보

2023년 11월 09일 (목)

인물동정 14면



윤길로(영월) 도의원은 9일 오전 10시 영월군 중

합사회복지관 락앤홀에서 열리는 제61주년 소방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11월 09일 (목)

종합 01면

‘특별한’ 강원-서울, 균형발전 파트너가 되다

우호교류·골드시티 협약 체결
특자도 출범 타 지자체 첫 협약
2024강원대회 성공 지원 다짐
‘수도권 강원시대’ 개막 한결음

강원과 서울이 지역소멸 위기 공동 대응 및 지역균형발전, 관광·경제·디지털 교류협력 등 새로운 협력체제를 구축했다. 특히, 서울은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주거정책인 ‘골드시티’ 조성사업이 전국 최초로 삼척시에서 시범 진행되는 등 서울시와의 교류 전면 확대에도 정 목표인 ‘수도권 강원시대’ 개막에 한발 더 내디뎠다는 평가다.

강원도와 서울시는 8일 오전 강원도청에서 ‘강원특별자치도와 서울특별시 간 우호교류 업무협약’과 ‘상생형 순환주택사업(골드시티)’ 협약을 각각 체결했다. 우호교류 협약은 김진태 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간 체결됐고, 골드시티 협약식에는 양 지자체장과 함께 박상수 삼척시장, 김현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오승재 강원개발공사 사장 등이 함께 했다.

이날 체결된 협약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타 지자체와 맺는 첫 번째 협약이다. 강원과 서울은 6개 분야에서 공동 사업을 진행, 새로운 형태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양 지자체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관광교류 활성화 △농·수·특산물 직거래 및 제

협프로그래밍 활성화 △국제행사 개최 상호지원 △바이오·의료산업 혁신 클러스터 간 연계협력 강화 △도시 디자인 정책 교류 등에 나서게 된다.

또, 서울시는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성공 개최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본지가 진행하고 있는 2024 강원대회 범엽 캠페인(‘나에게,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란’)에 참여해 대회 범엽 지원 사격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김진태 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타 시도와 맺는 첫 번째 업무협약”이라며 “관광과 문화에서 시작해 앞으로 점차 산업 분야까지 모든 부문에서 (서울시와) 교류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지사는 “서울 메가시티 구상이 조금 뜨거운데, 반대로 우리는 수도권 강원시대다. 서울 메가시티와 상충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각자의 역할을 하다 보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잠재력을 발휘해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는 데 서울시도 힘껏 부응하겠다”며 “서울과 강원은 지리적으로 가깝다 못해 한몸이 돼간다고 생각한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양 지자체 간 특별한 협력에 힘을 실었다. 김덕형 ▶ 관련기사 2·3면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박상수 삼척시장은 8일 강원도청에서 삼척 ‘골드시티’를 조성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영

강원도민일보

2023년 11월 09일 (목)

종합 03면

“윤 정부 실세 전부 강원… 서울·강원 일심동체 될 것”

오세훈 서울시장 추천 방문

정책 협약·간담회 ‘광폭행보’

“아이디어 있음 연락” 강원 구애

“군 시절 한방서 시도지사 2명”

김 지사에 덕담 친근감 과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 주요 당직자들과 만나 ‘강원도와 일심동체가 되겠다’며 “사업 아이디어가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강원 구애전’에 나섰다.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오 시장은 이날 오전 도청에서 강원·서울 양 지자체간 정책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오후에는 당원간담회를 갖는 등 광폭행보를 펼쳤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춘천 국민의힘 강원도당사에서 도당 주요당직자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강원도와 서울시가 협력할 수 있는 분야 등에 대해 다양한 비전을 제시했다. 간담회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박정하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위원장, 한기호 춘천·철원·화천·양구을 국회의원 등도 함께했다.

오 시장은 이날 강원도와 서울시가 업무협약을 맺은 ‘삼척 골드시티’ 조성 사업을 특히 강조했다. 삼척 골드시티는 삼척시에 2700세대가 서울 거주는 퇴직자들이 이주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 이들 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매입하는 사업이다.

오 시장은 “서울에선 은퇴한 분들이

집을 팔아 생활비로 쓴다. 부동산 가격의 차액을 이용하는 거다”라며 “SH에 팔거나 임대를 놓고, 강원도에 내려와서 살면 이들에게는 생활 여유가 생길 거다. 인구밀집 서울은 빠져나가는 효과, 인구가 필요한 삼척시는 순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경기 김포시의 서울편입 등 ‘메가시티 서울’ 전략도 고수하는 발언을 내놨다. 오 시장은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 선거 전에 (언급이) 되다 보니, 선거 전락인 것만으로 폄하되는 경향이 있다”며 “어제 (7일) 김포시장과 선거 후에까지 논의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날 김진태 지사와 오 시장은 30여 년 전 기무사 시절을 언급하며 친근감을 과시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그때 (기무사 복무 시절)는 1년 선배였는데, 지금은 4선 (단체장)”이라며 오 시장을 치켜세웠고, 오 시장은 “방 하나에서 시도지사 두 명이 나왔다. 일년 동안 같이 뒹굴고, 매일 손잡고 밥먹으러 가고 그랬다”고 복무 시절을 회상했다. 오 시장은 “말로만 협력이 아니라 강원도와 일심동체가 되는 경이까지 협력관계를 만들겠다”며 “실세는 전부 강원도에 있다. 전부 강원도 출신들이다”고 강원도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에둘러 언급했다.

박정하 강원도당위원장은 “오 시장은 자타공인 대한민국의 지도자 중 한 분이고, 당의 정치적 자산”이라며 “오 시장이 쌓아온 정치적 경륜이 강원도와 조화롭게 이뤄 발전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기호 의원은 “어느 분이 얘기를 3선 이상은 출마하지 말거나 다른 데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초청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 주요당직자 간담회가 8일 국민의힘 도당 회의실에서 박정하 도당위원장, 한기호 국회의원 등 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정호

가라고 하는데, 서울시장은 ‘4선’이라며 “4선을 한 서울시장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덕담을 건넸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김 지사와 오 시장 등은 지난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식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다녀갔던 춘천 샘밭막국수에서 오찬을 함께 했다.

이설화 lfi@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년 11월 09일 (목)

종합 03면

강원도-서울시 상생 실천 1호 '삼척 골드시티'

양도·시 협약... 2025년 착공 목표

지역 거점 도시에 '뉴타운'을 조성하고 서울 은퇴자에게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서울시 주거정책 '골드시티'가 삼척시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서울특별시는 8일 도청에서 골드시티 조성(상생형 순환주택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원과 서울간 제1호 실천사업이다.

골드시티는 수도권 주택문제와 지역 소멸을 동시에 해소하기 위한 주거정책이다. 일자리와 문화여가, 병원 등 인프라를 갖춘 지방 도시에 뉴타운을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사업 대상자는 서울에 주택을 보유한 50·60대 은퇴자다. 은퇴자는 주택 연금과 연계한 생활비를 지원받고, '골드시티'로 조성된 신규주택을 공급받는다. 은퇴자의 기존 주택은 공공임대입 또는 임대해 청년·신혼부부에게 재공급된다. 삼척시 골드시티는 강원도와 서울시, 삼척시, 서울주택도시공사, 강원개발공사가 공동 추진한다.

삼척시에 들어설 골드시티는 총 2700가구 규모로 구상됐다. 청정 자연환경과 병원, 대학, 문화·여가 등 도심 편의성을 갖춘 곳에 조성된다.

착공 목표는 2025년 말이다. 서울시는 입주 5년을 목표로 골드시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도청에서 골드시티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정말 기대가 되는 사업이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서울특별시의 특별한 상생발전 실천사업 제1호로 골드시티 사업을 진행한다"며 "자연환경과 입지요건이 뛰어난 삼척시에서 추진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에선 지역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차원에서 수도권 인구 집중과 지방소멸 두가지 과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해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삼척시는 한국의 나폴리다. 교통과 의료 인프라를 다 갖춰 쓰고 있다"며 "(오세훈)시장님 열의가 넘치시기에 반드시 성공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박상수 삼척시장은 "삼척시와 강원대병원이 (강원대학교) 제2병원을 삼척시에 유치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관련 용역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김덕형 duckbro@kado.net

강원도민일보

도교육청 내년도 본예산 1720억원 ↓ ... “사업 축소 없다”

올해 대비 감소 3조9709억원 편성
“세수악화 속 기금 편성 예산 줄여”

세수악화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이 올해보다 1720억원
줄어들었다.

8일도교육청은 2024년 예산안을 발
표했다. 내년도 본예산은 3조9709억

원이다. 이는 올해(4조1428억원)에
비해 1720억원 줄어든 규모다.

특히 경기침체로 인해 국가 세수가
악화됨에 따라 보통교부금과 법정전입
금이 전년 대비 5660억원 감소했다. 도
교육청은 그동안 쌓아둔 통합재정안정
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활
용해 부족재원을 충당했다. 도교육청
이 내년에 꺼내 쓰는 기금은 통합재정

2023년 11월 09일 (목)

종합 04면

안정화기금(3173억원)과 교육시설환
경개선기금(902억원)을 합쳐 4075억
원이다. 남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9800억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
금 5000억원 규모로 확인됐다.

다만 국가 세수 악화 상황에서도 기
금을 통해 대응, 강원특별자치도와 같
은 사업 일괄 감축은 발생하지 않을 전
망이다. 신규사업도 추진된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는 △강원특별자치도형
마이스터고 육성 37억원 △학생맞춤
형평가관리시스템 구축 50억원 △거
점형 기숙형 고교 지정 운영 35억원 △
AI서술형평가시스템 구축 25억원 등
이 있으며 전자철판 사업은 155억
6000만원이 편성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세수가 안 좋은
상황에서 현장을 위한 교육사업은 유
지하고 기금 편성 예산을 대폭 줄였다”
고 말했다.

정민엽

2023년 11월 09일 (목)

사회 05면

江原日報

철원서 18억대 다세대주택 집단 전세사기 의혹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압류됐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너무 불안합니다.”

철원에서 집단 전세사기 의심 사례가 발생했다. 본보 취재 결과 전세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세입자는 총 14세대, 피해액은 18억원에 달한다.

동송읍에 위치한 45세대 규모 다세대 주택에 전세로 거주 중인 A씨는 이달 말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세입자 14세대 도에 피해 신고 주택 압류·경매 절차 들어가 임대인 세금 채납 연락 두절 도·군 “주거·법률 긴급 지원”

계약 연장을 문의하기 위해 지난 10월 집주인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이후 자신이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세무서

등에 압류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집이 압류되고 경매절차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전세보증금 1억3,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안하다”며 한숨지었다.

취재 결과 A씨가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 14세대를 소유한 임대인 B씨가 국세 및 지방세를 채납, 세무기관과 지자체 등에서 이미 13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집을 압류했다. 이중

3세대는 경매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를 비롯한 세입자들은 10월 말 강원특별자치도에 전세사기 의심 피해를 접수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달 중순께 이들에 대한 피해 사실 확인을 하는 한편 보증금 반환소송 등 법률상당과 경·공매 절차 대응 등에 대해 지원 예정이다.

철원군도 임대주택 등을 활용한

긴급 주거지원을 검토하는 등 피해 규모 최소화를 위해 나서고 있다.

홍육선 철원군 민원허가실장은 “세입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피해 확인이 최우선”이라며 “원활하게 피해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건수는 100여건으로 이중 80여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철원=김대호기자

강원도민일보

춘천 산수리~홍천 모곡리 상수도관로 놓고 ‘동상이몽’

2023년 11월 09일 (목)

종합 04면

‘국지도 활용’ vs ‘강변 민가 중심’

위치 합의 의견차 착공시기 담보

미공급지역 불편 가중 대책 시급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춘천 남면과 홍천 서면 일원의 지방상수도 신설 계획을 두고 춘천시와 홍천군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양 시·군의 외곽지역 상수도관을 연결하는 취지에는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위치를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외곽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춘천-홍천 상수도관 연결 계획



8일 본지 취재 결과 춘천시는 지난해부터 홍천군과 협의해 홍천 서면 개야리와 모곡리 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인 홍천 서면 2단계 농촌생활용

수개발사업과 연계, 춘천 남산면 산수리, 남면 한덕리에 지방상수도를 조기 공급하는 방안을 강원특별자치도에 건의했다. 지난해 도비 40억원 지원을 확정했고 두 시·군은 현재 홍천 서면 모곡리까지 공급되는 상수도관을 춘천 산수리~홍천 개야리~춘천 한덕리~홍천 모곡리에 설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상수도 신설의 시작점인 산수리 상수도관의 위치를 두고 각 지역의 의견은 엇갈린다. 홍천군은 홍천강 줄기를 따라 밀집한 민가를 중심으로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반면 춘천시는 국지도 86호선을 가로질러 상수도를

공급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천군의 경우 홍천강변을 따라 민가와 시설이 밀집해 있어 민가를 따라 상수도를 연결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강변에 제방을 5m 가량 높이는 국가하천정비사업이 계획돼 있는 점을 감안, 홍천군안 대로라면 추진이 더딜 수 있다는 게 춘천시 입장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해당 위치에 상수도관을 설치한다고 해도 하천정비사업으로 언젠가 도관을 보수해야 할 상황이 생긴다”며 “국지도도를 활용해야 이웃마을까지 물이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는

게 낫다”고 밝혔다. 홍천군 관계자는 “국지도안과 기존 마을길안을 놓고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지역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춘천 산수리~홍천 모곡리 상수도 공급사업의 구체적인 예산이나 착공 시기도 담보 상태다. 이로 인해 상수도 미공급 지역 주민들의 불편은 장기화되고 있다.

전종선 한덕리이장은 “한덕리 본마을에는 마을상수도를 사용하고 외곽마을에선 계곡물이나 우물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승은 ssnnee@kado.net

강원도민일보

경포 올림픽특구 숙박단지 3곳 조성 속도감

2023년 11월 09일 (목)

지역 11면

강릉시 특구 내 총 2573실 계획

세계 100대 관광지 도약 뒷받침

공원·노후시설 관광지 개선 전망

강릉시 경포 올림픽 특구 지역에 대규모 숙박사업이 잇따라 추진돼 시가 추진하는 세계 100대 관광도시 도약에 기쁨이 마려지고 있다. 시는 경포 올림픽 카운티 조성 사업을 위한 특구 실시계획(변경) 절차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조성되는 콘도미니엄 숙박시설은 사업비 4100여억원을 들여 안현동 산 16-1 일대(옛 경포산장 일

대) 지하 4층, 지상 22층, 객실 581실 규모를 비롯해 각종 부대시설이 갖춰진다.

사업에는 유엠시스, 에이치제이매그놀리아 옹평호텔앤리조트, 슈탐엔코가 지분 투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경포올림픽카운티(주)가 사업시행자로 나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업이 추진되면 장기간 미사용 중인 노후 숙박시설과 수변 공원 등이 정비돼 관광지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동계 올림픽 특구 지역에는 강릉 디오션 259 피에프브이가 지난해 4월 착공, 현재 공정을 40%를 보이며 속도를 내고 있다.



경포 올림픽 카운티가 안현동 일대에 객실 581실 규모의 콘도미니엄 숙박시설을 조성한다. 사진은 조감도.

디오션 259의 호텔 ‘신라모노그램’은 사업비 5370여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21층 규모에 객실 1105실로 오는 2025년 상반기 준공될 예정이다. 또 경포대 초교 인근의 올림픽 특구에는 라군타운 조성사업이 추

진되고 있다.

비엔티파트너스가 추진하는 라군타운은 지난 1월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됐으며 경포대 초교 일대 부지를 포함한 안현동 일대에 지하 1층, 지상 34층, 객실 887실 규모의 대규모 숙박시설을 건설한다. 이같이 올림픽 특구 지역에 2573실 규모의 대규모 숙박시설이 조성되면서 관광객 수용에 물꼬를 트고 있다.

김일우 관광개발과장은 “경포 올림픽 특구로 지정된 3곳에 대규모 숙박단지가 각각 들어서 관광객 수용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며 “사계절 머물 수 있는 동해안 최대의 관광지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성배 sbhong@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년 11월 09일 (목)

사설/칼럼 19면

의대 지역인재 확대, 지역 근무가 관건

-비율상향 주장 잇따라... 현지 종사 제도화 필요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시도마다 지역인재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지역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적과 더불어, 비수도권 의료 공백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비율 조정에만 따른 부작용이 있는지는 면밀히 짚어보아야 하겠지만, 지역인재 비율을 확대할 수 있다면 열악한 지역 의료체계 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지역 의무 근무 연한을 정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과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해법을 모색하기를 바랍니다.

지역인재 비율 확대 방안은 전라남도에서 먼저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남대의대는 2024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지역출신 비율을 74%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024학년도 입시에서 전남대의대 정원은 125명입니다. 이중 수시·정시 인원을 모두 포함해 총 94명을 광주, 전남, 전북 출신으로 뽑기로 한 것입니다. 2025년 입시에서도 정원 125명 중 80%인 100명을 광주와 전남·북 출신 신입생으로 채울 예정입니다.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목표로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발표한 정부는, 의과대학

40곳을 대상으로 학생 수용 역량과 정원 수요를 조사하고 있어 추후 지역인재 비율 확대 여부가 관심을 끄니다.

강원 도내 의대도 정원 증원에 맞춰 지역인재 비율을 현행 20%에서 최대 50%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정원 증원에 앞서 전남대나 부산대처럼 지역인재 비율을 미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강원도에서도 지역인재 비율을 최소 50%까지는 늘린 뒤, 추후에 의대 증원에 맞춰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역인재 비율 확대가 지역 의료체계 개선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역 출신 의대생이 배출되더라도 타 지역에서 활동한다면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으로 양성된 의사들의 경우 현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양성된 의사들이 지역 의료에 종사하도록, 인재 전형 요건을 강화하고 의무 선발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의대 입학 정원 증원과 지역인재 비율 확대가 비수도권 의료 공백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11월 09일 (목)

사설/칼럼 19면

정원사업 관광객만 쳐다보면 안돼

-잇따라 국가정원뛰어든 시군, 주민 일상 밀접해야

강릉 춘천 인제 정선 등 강원 지방자치 단체가 국가정원 지정을 향해 뛰어 들었습니다. 국가정원에 앞서 지방정원 운영 실적을 요구하고 있어 강릉은 주문진 향호 일원에 26년 준공 목표로 진행 중이고, 춘천과 인제는 중앙투자심사 통과에 이어 도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선정됨으로써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선에서는 케이블카가 들어선 가리왕산 일대 정원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천혜 자연을 활용한 생태사업인 정원 조성에 박수를 보내게 되지만, '관광명물 조성'을 주 목적으로 내세워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수십억원 수백억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조성하는 정원이 외지 방문객 유치에 위한 관광기반시설 정도로 취급되는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1호 국가정원으로 성공을 거둔 순천국가정원은 관광용으로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바로 옆부터 강, 바다에 이르기까지 시내 구간이 정원으로 연결, 도보 접근이 편리해 일상적으로 이용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직장인 정원에서 생겨났습니다.

평상시 주민들이 정원 공간과 시설을 자주 이용하는 가운데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정원과 조경 관련 신규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효과를 냈습니다. 곧 정원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볼거리로서의 '정원의 탄생'이 아니라 생태주의에 걸맞게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녹색취미 확대, 관련 신규 일자리 창출과 같은 사회경제 문화 전반적인 변화입니다.

용대관광지 일원 15만㎡에 특화정원을 조성키로 한 인제군은 점진적으로 용대리 전체를 하나의 정원으로 만들어 랜드마크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뿐 대부분은 관광인프라 확충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강릉은 북부권 주문진 관광인프라 확대 건설이 주목적입니다. 관광시설이 시급한 점도 있으나 관광에 매몰해서는 순천국가정원의 수준을 뛰어넘기 어렵습니다.

춘천의 경우는 주민 생활권과 떨어진 상중도에 조성하기로 해당장 접근성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교량 외에선 박편으로 편의성을 높인다는 추가 방침을 내놓았으나 일상적 이용에 불편이 따릅니다. 더욱이 국가정원 지정 규모의 절반에 불과하므로 춘천역 일원과 옛 캠프페이지 연계 등으로 호수 건너편 주민 생활과 상생하는 확대 설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외지인이 몰렸다가 방치되는 것은 세금 낭비와 다름없습니다. 정원을 돌보고 이용하고 사랑하는 시민들이 다름 아닌 '관광명물'임을 명심하고 초석을 놓길 바랍니다.

江原日報

2023년 11월 09일 (목)

사설/칼럼 19면

청년들이 떠나는 강원자치도, 희망을 잃고 있나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인구 확보가 중요하다. 인구는 지역 발전의 기초이며 지역 성장의 결과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도 건전한 인구 구조 유지와 적정한 인구수가 중대한 요인이다. 지역은 저출산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구학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근래에는 인구의 자연적 요인에 의한 증감보다는 사회적 요인에 의한 변화가 이슈로 부각되며 지역마다 인구 문제에 관한 다양한 양상이 노출되고 있다. 최근의 인구 변동은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강원자치도는 청년층의 이탈이 심각하다. 최근 10년간 강원특별자치도 20대 주민 4만7,000여 명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으로 순유출됐다. 젊은층의 수도권 이탈 등의 여파로 강원자치도 인구는 153만명이 붕괴됐다.

본보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강원자치도 내 20대 인구 4만4,825명이 순유출됐다. 경남·북, 전북 등 비수도권의 20대는 강원도로 옮겨왔지만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향한 20대가 4만7,727명에 달해 순유출 규모를 키웠다. 서울이 2만8,387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 1만6,835명, 인천시 2,505명 순이었다. 이 같은 순유출 규모는 10월 말 기준 강원자치도 20대 인구 16만4,471명의 29%에 달한다. 이처럼 유독 20대만 수도권으로 옮겨가는 것은 취업과 학업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청년층 이탈을 막고 출산율을 높여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며 지역 발전의 기본 토대가 되는 인구학적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한 때다.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 인구는 필수 요건이다. 그래서 청년층 이탈을 줄이고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정책을 미뤄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해결책을 논의하기 전에 이 같은 흐름을 보는 생각의 틀을 바로잡아야 한다. 우리는 인구 감소를 하나의 ‘재난’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재난으로 보면 합리적인 정책이 나올 수 없다.

인구 감소를 ‘현상’으로 봐야 한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인구 문제도 마찬가지다. 더 살기 좋

최근 10년간 20대 4만7,000여명 수도권으로

‘병원 정책’ 통해 의료 서비스 확충 시급

각종 규제 완화로 기업 유치, 일자리 만들어야

고 더 좋은 직장이 있으면 지역을 옮기는 것은 당연한 사회 현상이다. 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인구증감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이주시킬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즉, 청년층이 떠나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젊은 부부는 분만 서비스가 부족하면 지역에 정착할 수 없다. 기업은 규제가 심해 제대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으면 사업체를 옮긴다. 일자리가 없으면 사람들은 이동한다. 병원 정책을 통해 분만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합리적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을 유치하면 일자리가 생긴다. 이는 인구 유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통로가 된다.

江原日報

2023년 11월 09일 (목)

사설/칼럼 19면

줄줄 새는 실업급여, '눈먼 돈'으로 계속 뇌물 전가

타인 명의를 동원해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받아 챙긴 근로자와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올해(10월 말 기준) 강원지역에서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는 544명으로 부정 수급액은 6억5,000만원에 달했다. 강원지청은 부정 수급자를 대상으로 추가 징수액까지 더해 13억9,000만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범죄 혐의가 심각해 검찰에 송치된 부정 수급자는 올해 66명, 부정 수급액은 4억1,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9명·2억8,000만원)보다 크게 증가했다. 지인은 물론 자녀 명의까지 동원해 갈수록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실업급여는 실직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하지만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실업급여를 받는 도덕적 해이가 근절되기는커녕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2020년부터 고용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실업급여액과 지급 기간을 확대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실업급여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부정 수급자도 덩달아 많아지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실업급여 반복 수급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실직 전 6개월을 일하면 실직 후 4개

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수급 횟수에 대한 별도의 제한도 없다. 국민의 세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이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급 기간 내 재취업률도 낮았다. 오히려 실업을 부추겨 '프리터족'을 양산하는 등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프리터족'은 'Free(프리)'와 'Arbeiter(아르바이터)'의 합성어다. 정규직 일자리가 아닌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프리터족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회가 건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업급여로 받는 돈이 일할 때보다 많은 역전 현상도 나왔다. 6개월 일하고 난 후 실업급여를 받는 행태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일하는 재미보다 놀고 먹는 '베짱이'를 챙겨주는 시스템으로 전락할 위기다. 이대로라면 정작 실업급여가 간절한 사람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어 빨리 치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급한 사회적 문제가 됐다. 실업급여를 악용하려는 이들을 차단하고 실업급여가 제대로 쓰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실업급여는 서민들에게 더욱 절실한 사회보험이다. 실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가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 불공정을 낳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루라도 빨리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